

동향정보

주요여성정책

지역동향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제동향

여성가장 59.5% '하층' 이라 생각

통계청이 작년 12월 5일 발표한 가족·보건·사회참여·노동부문 등에 대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28.9%로 3년 전인 2003년 조사 때(20.4%)보다 8.5%p가 증가했다. 반면 현재의 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도 32.3%에 달해 3년 전 28.3%에 비해 증가했다.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가구주의 53.4%가 자신을 '중간층' 이라고 대답했다. 성별로는 남자 가구주의 경우 상층 1.6%, 중간층 56.7%, 하층 41.7%로 중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가구주는 상층과 중간층이 각각 0.9%, 39.6%이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9.5%에 달해 여성 가장 10명 중 6명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42.4%로 부모만 따로 살고 있는 경우(56.3%)보다 낮았다. 자녀 중에서는 장남(만며느리)과 함께 사는 부모가 21.8%로 가장 높았으나 2002년 조사 때(24.6%)보다는 2.8%p 낮아졌다. 대신 딸(사위)과 함께 사는 경우가 5.7%로 4년 전(3.6%)보다 2.1%p나 많아졌다. 한편, 조사 대상 중 남편과 부인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43.9%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육아부담' 이 지적되었는데, 그 비율은 2002년 38.8%에서 올해 45.9%로 7.1%p 증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꼽은 응답은 18.5%를 차지했으나 4년 전 조사(22.8%)보다는 4.3%p 낮아졌다. 불평등한 근로여건(11.6%)도 4년 전 조사 때(12.4%) 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상용직 여성 증가, 절대규모는 여전히 작아

평균 이상의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직종에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70%를 여성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상용근로자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60% 이상이 여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1월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31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9만5천명 늘어났고 이 가운데 여성은 18만 명으로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61%를 차지했다. 여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남성의 약 1.6배였다.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36만5천명 늘어났고 이 가운데 남성이 18만4천명으로 여성(18만2천명)보다 2천명 정도 많았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28만7천명 증가)에서는 여성이 17만8천명 늘어 남성(10만9천명)의 1.6배였고 상용근로자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의 6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최근 취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절대 규모에서는 아직 남성들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는 1천344만4천명으로 여성 취업자(970만6천명)보다 38.5% 많았고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직군에서도 남성이 317만4천명으로 여성(182만3천명)의 1.7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은 48.8%로 남성 고용률(71.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63% 수준

2월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전체 남녀별 임금수준 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6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근로자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1년 63.6%를 정점으로 2002년 63.5%, 2003년 62.4%, 2004년 61.8% 등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05년 62.4%를 기록하며 반등세로 돌아선 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급여형태별로 여성의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 수당)는 남성의 66.1%, 초과급여(연장·야간 휴일근로)는 55.6%,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금 등)는 54.7% 수준에 그쳤다. 남녀별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7만927원, 여성근로자는 1인당 181만1천487원이었다. 남성의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209만4천17원, 초과급여 18만2천726원, 특별급여 59만4천184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은 정액급여 138만4천824원, 초과급여 10만1천612원, 특별급여 32만5천51원 등이다. 지난해 남녀 근로자 전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4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산전후 휴가사용, 중소기업 46.7% 증가

1월 30일 노동부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산전후휴가사용이 46.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은 처음으로 전체 사용자의 절반을 넘어 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분(90일)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만5천602명으로 2005년 1만7천446명에 비해 46.7%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4만8천972명으로 2005년 4만1천104명에 비해 1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 근로자는 2005년 1만492명에서 2006년에는 1만3천440명으로 28.1%, 남성 근로자는 208명에서 230명으로 10.6% 늘었다.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 수준에 그쳤다. 한편,

주요 여성 정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2006년 5,240명으로 2005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급자는 2005년 1만700명에서 지난해 1만3천670명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중전 40만원)지급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현행 1세 미만)된다.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10%로 확대

중앙인사위원회는 1월 4일 공직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1년에는 1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급은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정부정책 결정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관리자에 해당한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는 이번 계획은 일선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통보해온 계획을 토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 공무원의 재직기간, 여성 인력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 임용확대의 대상 직급을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한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현재 5.4%인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07년 6.2%, 2008년 6.9%,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시 여성 합격률 40% 넘어 사상 최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행정·공안직 233명, 기술직 71명 등 2006년도 행정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304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총 1만4천213명이 지원하여 약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4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38.0%)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행정·공안직의 44.6%, 기술직의 25.4%가 여성합격자였다. 특히 일부 직군에서는 '여초(女超)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제통상직에서는 최종합격자 16명 중 여성이 11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교육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9명 중 6명으로 66.7%를 기록했다. 행정직 최고득점의 영예도 지난해에 이어 여성에게 돌아갔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4세로 지난해 평균 연령인 27.3세와 비교해 한 살가량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61.8%로 지난해보다 15.5% p나 증가하여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32~35세의 고령 합격자는 15명으로 4.9%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 461만 명으로 남성 앞질러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서비스업체의 법인화·대형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18일 발표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여성 종사자는 461만6천 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해 처음으로 남성 종사자(446만2천 명·49.1%)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말에 비해 여성 종사자는 15.8% 증가했고 남성 종사자는 1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텔레마케터 등 사업지원 서비스(106.1%), 연구 및 개발(59.6%), 사회복지사업(58.1%), 부동산(53.3%) 등이었다.

보 건 복 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변경, 예산은 3.4조원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고 1월 1일 밝혔다.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만 0~4세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그리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0~13세 미만 전체 입양아동에 대한 월 10만 원의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아울러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200만 원)도 전액 지원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도우미를 파견하여 안전 확인 및 주거상태를 점검하고 정서지원 및 건강·영양관리 등에 대한 생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보육시설을 기존 11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4,000명에 대한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의 경우 표준 보육비용의 85%를 보조하며, 지원 인원도 1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31일, 2007년도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하였다.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비용은 총7조3,132억원(중앙부처 사업 5조8,966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원)이며 2006년 5조7,445억원에 대비하여 1조5,687억원(27.3%)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저출산 분야는 2007년 3조4,04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29억원(41.8%)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8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과제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역아동·청소년 보호, 산전후휴가 지원 등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고령인구 26.1% 증가

작년 12월 26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436만5천 명으로 5년 전보다 29.5% 증가했다. 234개 시·군·구 중 고령자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63개로 5년 전보다 34개, 고령자 구성비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가 된 곳은 87개로 늘었다.

여성인구는 2천357만6천 명으로 2000년 대비 2.9%(65만9천 명) 증가하였다. 여성고령인구는 26.1%,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4%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6.0% 감소하였다. 주 출산연령인 25~34세의 유배우 비중은 5년 전 대비 12.7%p 감소하고, 만혼화 영향 등으로 미혼 비중은 12.4%p 증가하였다. 가임여성의 경우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2005년 현재 15~49세의 가임여성은 1천309만7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만8천 명이 줄어들었다. 유배우 가임여성인구 역시 2000년 805만3천 명에서 2005년 764만 명으로 41만3천 명 줄었다. 기혼여성 1천441만4천 명의 평균 출생아 수는 2.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0.1명 감소했다. 아직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혼여성 827만9천 명의 평균 출생아 수는 1.7명이었고 이들은 앞으로 평균 0.2명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1.7%에 달하고 있다. 전체 부부 중 여성 연상의 비중은 결혼 시기별로 1950년대 이전 9.3%에서 1950년대 8.0%, 1960년대 5.3%, 1970년대 4.9%까지 낮아지다, 1980년대 6.3%, 1990년대 7.5%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족친화환경 낙제 수준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 27일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에 의거해 국내 기업과 대학,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705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7점에 그쳐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가족친화환경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가족친화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의뢰해 최근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탄력근무제, 자녀양육·교육 지원, 부양가족 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5개 범주를 종합해 산출한다.

조사 대상 가운데 정부기관(285개)의 평균 점수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46개)이 39점, 기업체(347개)는 31점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교육 지원은 산전후휴가제와 육아휴직제가 법정 제도로 규정된 만큼 비교적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산전후휴가는 조사 대상 중 625개(88.7%), 육아휴직 제도는 509개(72.2%)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족간호 휴직 제도를 도입한 곳은 29.1%에 불과했는데, 정부기관은 50.2%로 과반수를 기록했지만 기업체는 11.2%에 그치고 있다. 정시 퇴근제에 관해서는 9.1%(64개 기관)가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의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8곳(15.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기관들은 가족친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더 중요한 경영 이슈 산재', '제도의 효과 부족', '투자비용'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은 근로자 만족도 개선과 인력 유지의 수월성, 기업이미지 개선 등 때문에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확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6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도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4,386억원보다 1,550억원 증액된 5,936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101만명 가운데 76% 이상인 77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부터 도입된 만 2세 이하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만 1세 미만은 29만2천원, 만 1세 13만 4천원, 만 2세의 경우 8만6천원을 보조받게 된다. 또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일원화된다.

한편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육아·보육 관련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농림부는 1월 3일, '2007년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작년보다 평균 37.2%, 유아 연령별로 최대 59.5%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6세 어린이가 취학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 지역을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정부는 자녀가 있지만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가정 육아비도 작년에 비해 평균 37.3%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총 508억 원으로 작년의 383억 원보다 32.6% 늘어났다. 영·유아 양육비와 가정 육아비 지원 혜택은 한 달에 각각 3만2천 명, 4만6천 명이 받게 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농어촌 지역은 전국 1천420개 읍·면 가운데 33.5%인 476개에 달한다.

어린이집에도 표준보육과정 보급

정부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결정해 배포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이 이루어져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에 걸쳐 유아교육, 심리학, 의학 등 각계 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 학부

주요 여성 정책

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등을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6개 영역은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되 각 연령집단별 보육내용은 다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개인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아울러 교사를 위한 영역별, 연령별 지침을 별도로 제시해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식과 지도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보육 교사 재교육에 사용하고 그 활용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반영해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자 증가추세, 남성 689명, 여성 62명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751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발견되어 2005년 감염자 680명에 비해 10.4%가 증가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한편 총 누적감염인수는 4,580명이며 이 중 830명이 사망하여 현재 3,750명의 감염인이 생존해 있다고 전했다.

2006년에 발견된 에이즈 감염인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89명(91.7%), 여성이 62명(8.3%)으로 성비는 11: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21명(29.4%), 40대 183명(24.4%) 순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484명 중 수직감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남성이 438명으로 이 중 이성간성접촉 228명(52.1%), 동성간성접촉 210(47.9%)명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은 46명으로 이성간성접촉이 45명(97.8%), 수직감염이 1명(2.2%)이 확인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에 발견된 1명을 포함하여 국내 수직감염사례는 전부 6명으로 이들 모두 임부의 HIV감염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예방조치가 없었던 경우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직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임부의 태반을 통해 태아가 감염되는 것을 뜻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부의 치료를 통해 수직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기때문에, 산전 검사 시 HIV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 회 문 화

법사위, 가족정책기본법 공청회 결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족정책기본법)의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6년 12월 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 여부를 토의했으나 사실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여론 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안상수 위원장 등의 지적에 따라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실혼의 가족 인정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던 가족정책기본법은 작년 11월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를 가족의 범주에는 넣지 않되 특례조항으로 규정, 지원 대상에만 포함하기로 수정한 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었다. 이 법안은 2007년 3월 법사위의 공청회를 거쳐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정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여성·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 단체들은 작년 12월 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정책기본법의 국회 표류를 질타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절차가 일부 보수 단체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발의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다시 공청회를 결의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법사위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면 개정안을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8일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1월 18일 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여성 중 인권이나 기본 자유를 침해당 했지만 국내 사법 및 행정상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제 독립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청원을 접수한 여성차별철폐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협약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조사 후 논평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여성관련 차별사건을 조사할 때 반드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숙지해 인권위가 기각한 사안이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오는 1월 1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나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선택의정서 채택을 미뤘으나 작년 10월 18일 가입했다.

한국의 사회지표, 결혼 증가·이혼 감소

통계청이 1월 26일 발표한 『2006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노동, 소득·소비, 복지 등 13개 부문의 489개 지표를 담고 있는데, 지표에 따르면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 1.16명보다 0.08명 감소하였고, 2005년 평균수명은 78.6세로 2004년(78.0세)에 비해 0.6세 길어진 가운데 남자 75.1세, 여

주요 여성 정책

자 81.9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8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출생성비(2005년 출생아의 남녀 성비)는 107.7명으로 전년도 108.2명에 비해 0.5명 감소하였고, 10년 전인 1995년 113.2명에 비해서는 5.5명 감소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강한 부산, 대구, 경북 및 경남 지역의 경우 2005년 출생성비가 10년 전에 비해 각각 9.9명, 6.2명, 7.7명, 9.2명 감소하였다.

2005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비중을 보면 4인 가구(27.0%), 2인 가구(22.2%), 1인 가구(20.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도 1985년 4.1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연간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6천4백 건(쌍)으로 2004년 31만9백 건(쌍)보다 약 5천4백 건(쌍) 증가하는 한편, 연간 이혼건수는 2005년 12만8천5백 건(쌍)으로 2004년에 비해 약 1만1천 건(쌍) 감소하였다. 연간 재혼건수는 2005년 4만6천4백 건(쌍)으로 10년 전인 1995년 재혼건수 2만5천7백 건(쌍)의 1.8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0.9세, 여자 27.7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3세, 여자는 0.2세 높아졌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남자 2.5세, 여자는 2.3세 높아졌다. 2005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2.1세, 여자 38.6세로 최근 10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첫 자녀 출산 시 모(母)의 평균연령은 29.1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10년 전에 비해서는 2.6세 높아졌다.

여성계,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월 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임종인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여성인권법연대는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며 단순협박과 폭행도 성폭력의 강제행사로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강간 개념을 확장하고 성폭력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으며 보호감독 관계를 남용한 성폭력이나 장애인 성폭력 관련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성폭력에 관한 현행 형법 규정이 담고 있는 남성 편향성을 극복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가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개한 개정안은 ●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단순한 협박과 폭행을 성폭력의 강제 행사로 인정하며 ●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 행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이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순 협박과 폭행으로 성폭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성폭력의 강제 행사로 인정하

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과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고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동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등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를 폐지했다. 가중처벌 조항에서 친족 관계를 현행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당 증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월 14일 발표한 2006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당 사유는 가정폭력(36.6%, 1천261명), 성격차이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3.8%, 1천166명), 남편의 외도(16.3%, 562명) 순이었다. 상담사유 중 가정폭력이 2002년의 25.6%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여성의 이혼 상담의 3분의 1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이 26.2%에서 38.0%로 증가했다.

또한 혼인기간이 31년 이상 된 황혼이혼의 경우 10년 전에는 3.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결합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남성 초혼-여성 재혼의 이혼상당도 2003년 1.9%에서 지난해 3.6%로 증가하였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이한 사실혼 해소 상담 역시 2005년 162건 보다 1.6배 증가한 25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혼상당은 남녀 모두 고졸(여성 41.4%, 남성 33.6%)이 가장 많았지만 사실혼 해소 상담은 대졸(여성 35.1%, 남성 53.2%)이 가장 많아 고학력자일수록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된 이혼상담은 3천973건이었고, 이 중 남성의 이혼 상담 건수는 총 526건이었다.

국제결혼 피해방지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만9천942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국제결혼 관련,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 등 총 15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복지부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선정 시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을 확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 결혼 준비, 사후관리 등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확인 ● 중개업체를 통해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 ● ‘결혼 정보업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의 기준·절차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한 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하여’라는 동영상·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이번 11차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5,651명이다. 명단에는 성명과 연령, 생년월일, 주소,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돼 있다.

공개된 성범죄자는 유형별로 강제추행 191명, 강간 155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 알선 18명, 음란물제작 2명 순이었으며, 남성이 4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 138명, 회사원 101명, 자영업 83명, 서비스직 36명, 일용노동 77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은 모두 134명이었다.

피해 청소년은 총 1,478명으로 성매수가 743명(50.3%)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피해 청소년 평균연령은 강간 14.2세, 강제추행 10.6세, 성매수 15.3세, 성매수 알선 16.7세, 음란물제작 16.6세 등이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위는 지난 9월 말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고용할 경우 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위는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만 20세까지)제도 도입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금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형 집행후 10년 간) 등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1월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해 제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성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대했으며,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재)부산여성센터의 주최로 2007년 부산여성신년인사회가 1월 16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부산지역 여성관련 단체지도자, 학계 여성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남식 부산시장의 축하 및 신년메시지 전달과 함께 부산지역 여성계의 관심사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가칭)의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재)부산여성센터에서는 지역여성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관련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참가, 해외기관탐방 등의 다양한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2007년 3~10월이며, 신청자격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로 구성된 2인 이상 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고학력 전문직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행정, 법률, 경영·경제 등 13개 분야를 나누어 '2006 부산 전문여성 인명록'이 발간되었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0차 정기총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은 여충리 탄생,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된장녀류의 논쟁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여성학 교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부산여성정책연구소는 부산의 제도권 내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5.31지방 선거 결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12.7%, 기초의회에서 18.6%의 여성이 제도권 내로 진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여성의원 간담회』를 2007년 2월 27일에 선거관리위원회 4층에서 개최하였다. 여성의원의 양적인 증가로 인한 의회의 질적향상 제고와 함께 여성의원 진출확대에 따른 의회구조의 변화, 의회 내 활동에서 여성의원이 공유하는 경험, 여성의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방향, 초당적 여성의원의 공동전략 개발, 생활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성폭력의 피해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부터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2월 2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 성·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아동학대예방센터,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또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전용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임신부 및 2000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

정을 우대하기 위한 여권발급 전용 창구에 전담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접수, 기존 7일인 발급 기간을 2~3일의 단축, 신청자의 희망지역으로 무료 택배 조치 등 윈스톱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74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 시행과 「임산부 우대·배려 환경 조성」 등 다양하고 참신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선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자녀모범가정은 읍·면·동장(구청장·군수 확인), 초·중·고 교장(지역교육청 확인), 각급 시민·여성·사회단체장의 추천으로, 출산친화기업은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관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울산지회, 각급시민·여성·사회단체 등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3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부산시청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3층에는 부산지역의 보육전반에 관한 전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도 동시에 개원식을 가졌다.

부산시는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성희롱 없는 직장분위기의 조성 및 모성보호,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등 **남녀고용평등 모범업체**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3월 9일까지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 수범하는 모범 기업을 발굴하여, 4월 첫째주 '남녀고용평등주'에 시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 온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은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관서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고용현장에서의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을 선발한다.

울산광역시

김 혜 립 |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와 울산광역시 여성정책과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울산문수월드컵컨벤션 트브르홀에서 울산여성포럼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50여명의 여성대표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과에서는 2007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에 관한 기본 현황과 여성정책의 주요과제를 언급하고, 여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인적자원활용 활성화 추진, 여성인권보호, 가족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보육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제고 등 세부추진계획을 알렸다.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 2006년 업무 성과 보고와 동시에 지역여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및 비전 제시, 연구의 공공성, 선도성의 목표하에 구축된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학술행사,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사업, 발간사업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여성포럼 조직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권 및 복지증진, 그리고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여성활동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된 울산여성포럼은 여성정책 및 시정에 관한 제안과 자문, 여성에 관한 연구 및 출판, 사회적 유대증진 및 정보교류, 여성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울산여성포럼의 대표와 감사, 임원 및 운영위원과 복지, 경제, 문화예술, 인적자원개발, 지역공동체 등 5개 분과별 분과장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울산여성포럼의 조직이 정비되고 정관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 10일에는 '가족친화형 공동체 만들기'라는 전체 포럼 주제와 연결하여 5개 분과별 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임원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박미아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출판홍보팀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2007년 2월6일(화) 수원 인계동 소재 호텔 리츠에서 개최한 2007년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 출범식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원은 이번 2007년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 출범식이 도내 전문여성간의 유대강화와 연대활동 증진을 통한 권익향상이라는 본 네트워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각종 온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이들 전문여성의 의견이 경기도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여성정책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원은 한편, 출범식에 앞서, 2006년 실시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새로 의회에 진출하거나 도 및 시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신규 여성정치인과 여성위원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등 신설 분야의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가 수록된 「**2006 경기도 전문여성 인명록**」을 발간했으며, 2006년 업데이트 버전에는 총 11개 분야 1,389명의 도내 전문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집대성되어 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2005년 12월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성평등 강사은행**(구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통해 2006년에는 총 117건의 강사를 연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육 분야로 구분해보면 전체 117건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42건, 양성평등교육이 15건, 성교육이 62건으로 나타났다.

본원은 한편 경기도내 각종 기관들의 교육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명 또한 '성평등교육 강사는 행'으로 바꾸고 크게 강사육성사업과 강사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 성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강사는 행 소속 강사 규모를 100명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본원은 2006년 12월 19일(화) 15시 본원 5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원이 2006년 주요과제로 추진한 「경기도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녀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 기혼여성의 출산장려보다는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박숙자 초대원장이 2007년 3월 5일 제2대 원장으로서의 집무를 시작했다. 개원 2주년과 기관장의 제2 임기를 맞는 본원은 그간의 연구 및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경기지역 기업체의 여성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역특성별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2006 경기도가족여성백서' 등 약 17건의 연구 과제를 비롯하여 도 공무원 및 각종위원회, 사회지도자 성 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 강사은행 및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운영 등 교육훈련 사업에 정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제9기 **여성지도자 과정**에 100명을 선발하여 교육한다. 학력, 연령 제한 없이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며, 교육은 3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으로 35주에 걸쳐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장안대학에 위탁교육 실시한다. 경기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학장명의 수료증서, 우수 이수자 및 공로자에게 학장명의로의 공로상 수여 등 동문회원으로 우대관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8회에 걸쳐 938명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수료생들은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여성회관'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 2월2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회의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36년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회관의 명칭변경은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공모를 통해 유능한 여성인적자원 육성, 자기계발기회 제공, 개인능력 및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경기도여성비전센

터가 도내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내 집처럼 아늑한 쉼터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 상 북 도

김 명 화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부모들의 육아부담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보육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두 8장 64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여성정책의 예산계획 반영,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여성발전 기금 조성·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과 타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규정됨으로써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이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북도의 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보육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18일 포항여성문화회관에 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6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오는 3-4월 중으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종합정리 및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경북도와의 협의, 자문위원들의 조례안 검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5월에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인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난 2005년 실태조사에서 1,544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2,417명으로 873명이 늘어나, 전년 대비 50%를 넘어서고 있다. 1월 4일 마련된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는 여성가족과 등 10여개 관계부서가 협의·조정해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올해부터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도비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비지원과 시군 협력을 함께 연계해 각종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종합대책은 우선 추진기반 정비, 결혼과 이주 및 정착과정 지원, 교육적응과 경제생활 지원사업을 분야별 과제로 해 각종 통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경북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민간부문, 관련 지원기관, 주한대사관과 해외기업체까지 연계시키고, 특히 주한 각국 대사관이나 해외주재 기업, 기관 등과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8~9일에는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군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제공할 한글 강사 1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총 4주간, 120시간의 교육일정으로 '한글공부방 운영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는 이들을 활용하여 가족의 반대나 어린 자녀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외국인 주부들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27일에는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대모(자원봉사), 초청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모결연식'을 가졌다. 결혼이주여성 대모제도는 농촌거주 결혼이주 여성 중 성·가정폭력 및 피해우려 여성을 대상으로 친정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현재 777명이 결연하였지만, 앞으로 여성단체, 사회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의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이주여성 전원에게 대모결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공간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고자 작년 12월 경북테크노파크로 이전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현재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5개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여성사를 정립하기 위한 세 번째 작업으로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본 경북여성의 삶』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여성긴급전화 1366은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 동안의 상담 및 보호실적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365일 너와 소통하다'를 발간해 경북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배포, 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1년 9월 개소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5만2천447건을 상담하였다. 상담내용 중 가정폭력(14.8%), 이혼(8.4%), 부부갈등(6.7%)이 29.9%를 차지하였으며, 성폭력 및 성매매문제가 각각 3.4%, 1.3%로 나타나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예방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5년 98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350건에 달했다.

포항여성회 부설 **파랑새이주여성센터**에서는 지난 2년간 포항지역과 인근 이주여성들의 상담을 총정리한 '이주여성상담사례집'을 펴냈다. 이 상담사례집은 경상북도에서는 처음 발간된 것으로 이

주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담통계를 분석하고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 영 태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5인을 주축으로 의원 15명의 공동발의에 의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집행부 위주의 조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여성정책의 기본바탕이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은 넓게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조례로서 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통계자료의 성별 표시, 정책의 성별분석, 양성평등교육 및 할당제 명시, 기존 여성특별위원회에게 부여된 기금심의와 별도 예산 편성 등 독점적인 지위를 2008년부터 사무국 폐지 등 본연의 자문기구로 돌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100여개의 위원회 가운데 여성특별위원회는 2000년 출범 이래 7년째 이어오면서 독립적인 예산 지원, 7급 공무원 파견, 사무국 지원 등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여성 정책과 관련한 기구와 조직부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던 연구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여성정책연구센터(2005년 4월) 설치,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 및 연구 기능 강화에 따른 여성능력개발본부(본부장 3급)로의 확대, 기존 여성정책과의 3개 계인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담당을 다시 세분화하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의 4개 계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2007년까지 여성특위 사무국을 존치시키고, 2008년부터 여성특별위원회를 본연의 '자문기구' 역할로 변모할 예정이다.

성·학교 폭력 피해를 위한 **제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작년 12월 8일 한라병원에 개소되었다. 상담실, 영상진료실, 진술녹화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경찰관과 전문 상담사 등 1일 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의료상담과 법률지원,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가정 화합의 장인 '국제결혼 가족 축제 한마당'이 작년 12월 15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12월 28일에는 열린다문화가족상담터가 개소되어 가정 및 사내폭력, 사업장 이동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로 거주할 곳을 잃은 외국인을 위해 이주여성상담터, 이주노동자상담터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협의 이주여성농업인 초청 '제주문화체험' 실시가 2월 26일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 **제주도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과 보육

시설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비 지원, 모·부자 자녀 학습비 확대 월 7만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지원,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직업전환 생계비 제공,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전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학여행경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4개소,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을 올해 8,4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원으로 증가 등의 주요 사업이 발표되었다.

2월 6일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 여성인 '김만덕'을 여성CEO로서 화폐인물로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함이 재논의되었다.

농도로써 제주도의 활발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회의 총연합 제주도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제주도 연합 제6기가 2월 13일 출범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남윤인순)은 2월 27일 "2007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로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을 공론화 하고 경종을 울린 지난 2002년의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 고정희씨 등이 선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4개년 계획(2007-2010)의 수립을 위해 실무T/F팀과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오는 3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임 UN 여성 부사무총장, 사퇴 의사 없어

미기로(Asha-Rose Migiro) 신임 UN 부사무총장이 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탄자니아의 외무장관 출신인 미기로는 UN의 두 번째 여성 부사무총장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취임 전부터 여성을 부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기로 부총장은 외무장관직을 1년밖에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은 임명 시부터 미기로 부총장이 UN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서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며 비난해왔다. 반 총장은 “외무장관 시절부터 미기로 임명자의 능력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임명된 모든 이들이 그들의 능력과 성과로 평가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기로 부총장은 본인이 탄자니아 정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았고 학문적으로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다며 언론의 공격에 일갈했다.

UN의 경제사회분야를 이끄는 UN 부사무총장직은 유엔개혁의 일환으로 1997년 말 총회를 통해 신설되었으며, 첫 번째 부사무총장은 캐나다 국방차관 출신의 여성 프레셰트(Louise Frechette)였다.

세계은행, 10대 정책분야 여성개발 꼽아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은행의 10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거버넌스, 청소년 등과 더불어 여성개발(Gender and Development)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2006년 9월부터 향후 4년간 미화 2천4백5십만 달러의 예산으로 젠더행동계획을 운영하게 된다. 동 계획은 (1) 여성과 에이즈 문제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2)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수자원, 도로, 위생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금융 등의 핵심 경제영역 발전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장려할 것, (3) 여성개발에 대한 자원배분을 증가할 것, (4) 성차별적 경제 관행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관련 통계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였다.

세계은행은 여성의 교육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가 현명한 경제이므로,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가 남녀를 넘어 사회 전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 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인정

미 연방대법원은 유통기업 월마트(Wal-Mart)에 대한 성차별 소송을 검토한 결과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이후 월마트에서 근무한 약 150만 명의 여성들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차별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의 성차별 혐의는 여성에게 동일직급의 남성에게 비해 5~15%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과,

승진 및 직원 복지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 등이다. 고소인들은 월마트 전체 직원의 2/3가 여성이지만, 관리자급의 여성 비율은 1/3에 그치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 같은 차별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와 근거가 충분하다며 집단소송 인정사유를 밝혔다.

반면 월마트는 미국 내 3,400개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적합하지 않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성차별은 없었다며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조달업체, 성차별 배상 합의

굿이어(Goodyear)가 성차별 소송에서 92만 5천 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1월 합의를 이루었다. 굿이어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 시 여성을 차별한 혐의를 받았으며, 노동부는 이들 800여명의 여성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굿이어는 미 정부조달업체로서, 성별, 인종, 종교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노동부는 동 사건을 통해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 같이 제도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조달업체들에게 시사하고자 한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굿이어의 또 다른 성차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는 19년 동안 굿이어에서 일했던 여성으로, 동등한 경력의 남성에게 비해 상당히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을 퇴직 후에야 알게 된 것이다. 상소 법원은 6개월 출소기한법을 적용하여 36만 달러의 보상금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는데, 최근 6개월간 의도적으로 차별적 임금이 지불된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이를 해명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임금차별을 심사하는데 있어 출소기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인가를 심사 중이다.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

지난 12월 당선된 에콰도르의 새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는 남미의 양성평등을 염원해 왔으며, 전체 17명의 장관 중 7명을 여성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라리바(Guadalupe Larriva) 장관은 에콰도르 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모든 조직이 민간 사회의 영향력 하에 놓일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며 민간인 여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치러진 연방평의회 선거에서 사상 최초의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동 선거는 선거인단 6689명 중 1100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는 여성 후보 63명을 포함해 총 438명이 출마했는데, 쿠바이시(AI Qubaisi) 후보가 3위를 차지함으로써 수도 아부다비의 의석 4석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방평의회는 모두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직접 발의하거나 입법하지 못하는 제한적 자문기구로 내각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의원들은 각 에미리트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선진적인 여성정책을 펼쳐온 튀니지에서 최초로 여성 야당총수가 탄생했다. 메이 엘제리비(May Eljeribi) 의원은 지난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제1야당인 진보민주당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며, 우선 정치수를 사면하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스위스 연방의회는 칼미-레이(Micheline Calmy-Rey) 외무장관을 2007년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1998년에 드레뤼스(Ruth Dreifuss)에 이어 스위스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칼미-레이 장관은 유효투표 192표 가운데 147표를 얻는데 그쳐, 지난 70년간 대통령 선출 투표 결과 중 가장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칼미-레이는 스위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늘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당선자는 지난 1979년 제네바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외무장관으로서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스페인, 양성평등법안 검토

유럽에서 양성평등의 제도화가 가장 더딘 국가 중에 하나인 스페인에서 양성평등법안을 심의 중이다. 동 안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 있어, 각 당은 후보를 지명하는데 있어 최소 40%를 여성 후보로 지명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도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노르웨이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회는 또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 군 지원에 요구되는 최소 신장을 낮추는 등의 조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스페인에서는 1975년에서야 여성이 남편의 허가 없이 여행이나 취직을 할 수 있고,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나 2004년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는 자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자파테로 총리는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현재 스페인은 유럽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내각의 여성 대표성이 높은 국가이다.

프랑스, 여성정치참여증진법안 검토

지난 11월 말 프랑스에서는 지역 및 중앙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이 승인되면, 2008년부터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비율이 같지 않은 정당에 대한 벌금을 증액하게 된다. 프랑스는 2000년에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당이 남녀 동수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

보 건
복 지

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입법화하였으나, 정당들은 여성 후보를 내는 대신 벌금을 물어왔다. 프랑스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12.2%에 지나지 않아 EU 가입국 25개국 중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 법안은 또한 인구가 3,500명 이상인 지방정부의 고위 의사결정직과 의회에 남녀 동수의 대표성을 요구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약 4,000명 이상의 여성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당 대선 후보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도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 당선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아일랜드 청소년, 성행위 가능 연령 의견 발표

아일랜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상대 남성의 나이에 상관없이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입법화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아동보호위원회는 210명의 청소년들에게 성행위에 대한 합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적정 연령과 성교육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1) 성행위를 합의할 수 있는 연령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2) 이를 어긴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 또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3) 합의에 의한 청소년 간의 성행위도 남녀의 연령차가 2년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성병과 피임을 포함, 실질적이고 진보적인 성교육과 무료 피임지원 실시를 요구하였다.

미국, 일·가정 양립 정책 뒤쳐져

하버드와 맥길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 미국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있어 다른 선진 및 중진 국가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Harvard-based Project on Global Working Families과 McGill's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에 의해 진행된 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레소토, 라이베리아, 스와질랜드 및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173개국 중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5개 국가 중 하나로 드러났다.

동 연구에 따르면, ① 연구대상국 중 65개국에서 아버지 양육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31개국은 14주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② 107개국이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권리를 인정하며, 73개국에서는 모유수유 시간이 유급이지만 미국은 역시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③ 145개국은 유급 병가가 있으며, 일주일 이상의 병가를 보장하는 국가도 127개국에 달한다. 미국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근거한 무급 병가가 있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④ 134개국이 최대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같은 규정뿐만 아니라, 최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한편, 미국의 사설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는 여성의 교육수준, 빈곤, 건강보험, 경영권 등을 분석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주(州)와 최악의 주를 선정하였다. 동 연구에서 미국 여성의 평균 연봉은 3만1천800달러로 4만1천300달러인 남성 평균 연봉의 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현재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기까지는 50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스위스 경제부, 아버지 출산휴가에 제동 걸려

스위스 경제부가 올해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밝힌 유급 5일 무급 20일의 아버지 출산휴가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경제부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장관은 지난 1월 경제부처가 스위스 경제 전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면 일·가족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아버지 출산휴가의 즉각적 도입을 발표했으나, 다음날인 10일 연방 내각은 정부 내 모든 부처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부 단독 행동을 보류시켰다. 내각 대변인은 이번 여름에 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아버지 출산휴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여성은 임금의 80%를 받는 최소 14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아버지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통상 기업들은 1일에서 3일의 아버지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2주부터 4까지의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들도 있고 유급 아버지 출산휴가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 덴마크는 총 28주의 유급휴가 중 10주를 아버지가 쓸 수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1년의 유급휴가 중 최초 21주는 어머니가 쓰고 남은 휴가는 양 부모가 나누어 쓸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15달의 유급휴가 중 한 달을 아버지가 쓸 수 있다.

러시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2대 중점과제로 출산장려와 국방력 강화를 제시했다. 1990년대 2.08이던 출산율이 2005년 1.17로 감소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현재 인구 1억 4,830명이 2050년에는 1억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정부가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 나선 것이다.

2007년부터 발효되는 '유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법'은 두 번째 자녀부터는 국가가 '모성(가족) 자금'의 형태로 25만 루블 규모의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3년 뒤로 연기됨에 따라 실제 자금은 2010년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동 기금은 주택의 건축·개축·매입 또는 자녀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연금기금의 예산에 편입된다. 또한 '임신·출산 보조금 지급법'을 제정하여 의무사회보험 가입 여성에게 임신·출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보조금 액수는 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하원에 상정되었다. 러시아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은 여성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조국당(Rodina Party)에서 발의한 '보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개정안'은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서 없이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호주 정부는 4월부터 12-26세의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Gadasil) 접종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년간에 걸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4억3천6백만 호주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18세의 여학생은 4월부터 학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18-26세의 여성은 일반 병원에서 향후 2년간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백신은 임상실험을 통해 자궁경부암 70%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변종과 성병의 일종인 콘딜롬(genital warts)을 일으키는 HPV 변종의 감염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세계 최초의 성병 예방 백신으로, 성적 접촉으로 인해 HPV에 노출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10대 여성에 대한 동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가을학기에 6학년에 진학하는 모든 여학생은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일부 학부모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백신이 아직 안전한지 안심할 수 없다면서 의무접종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백신 접종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행정명령은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의무접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여성보건 관련법 제정

미국 정부는 조산과 임신, 부인암 등 여성보건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미숙아법(Premie Act)은 조산, 저체중과 임신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조산으로 인한 영아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기관 간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조산을 감소와 조기분만이나 임신합병증 등에 대해 임신부를 위한 과학적 처치 기준을 마련할 것,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관련 연구를 보강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종사자 및 일반인들에게 조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 등을 위임하고 있다.

부인암법(Gynecologic Cancer Education and Awareness Act)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인암에 대해 여성 및 의료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벌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장관이 관련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2009년 회계연도의 관련 예산 1천65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포르투갈 낙태법 국민투표, 과반수 미달

2월 11일 진행된 낙태 합법화 여부에 대한 포르투갈의 국민투표가 투표율 44%를 기록하여 유효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 가운데 60%가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함으로써 반대율 40%를 넘어섰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올려진 새 법안은 임신 10주까지 모든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강간이나 태아의 기형,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할 경우에 한해 임신 12주까지의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한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포르투갈은 낙태법이 허가하는 이외의 낙태 시술에 대해 수술을 받은 여성과 의료진, 조산사 모두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한 조산사는 낙태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8년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호세 소크라테스(Jose Socrates) 총리는 투표율이 미달되었지만 60%의 지지 여론을 반영하여 이 법안을 국회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현재 낙태시술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포르투갈 여성들이 스페인 등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거나, 불법 시술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90%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낙태 관련 법안 도마 위에 올라

미 하원은 논쟁이 되던 태아고통법안(Fetal Pain Bill)을 부결하였다. 동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낙태 시술 시 임신부에게 시술 과정에서 태아가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주의를 주고, 태아에게도 마취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많은 여성 단체들로부터 과학적 근거 없이 낙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위협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2005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아는 30주까지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미국의 주요 여성단체 NOW는 동 법안이 심리적 여성들을 위협하여 낙태를 저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태아마취비용을 부가하여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3년 통과된 낙태금지법(Partial-Birth Abortion Ban)을 재심 중에 있다. 이 연방법은 임신부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사우스다코타 주의회는 지난해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

는 법안을 심의, 거부하였고 올 2월에도 이를 수정한 비슷한 법률을 다시 거부하였다. 사우스다코타는 상주하는 낙태 시술 의원이 없을 정도로 낙태에 대해 보수적인 주로 지난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성년자의 낙태시술에 부모의 사전 동의를 필수화하는 안을 기각하였다. 오리건 주에서도 같은 안이 54%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주에 따라 청소년 낙태 규정이 다른 미국에서는, 많은 10대 여성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서 시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월 민주당 왁스먼(Waxman)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임신상담센터(crisis pregnancy center)들이 거짓된 정보로 낙태를 저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센터에서는 상담자 여성에게 낙태로 인해 불임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의 정보를 유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4천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 연구용 난자 기증 허용

영국의 인간생식배아기구(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가 연구용 난자 기증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체외수정이나 불임수술과 같은 부인과 수술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난자만이 연구용으로 쓰일 수 있었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은 요청 시 250파운드의 보상금과 여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HFEA 관계자는 난자 기증을 허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과학적 이익이 난자기증의 부작용보다 크다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런던대학의 의학윤리학과 디킨슨(Donna Dickenson) 교수 등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난자를 팔기 위해 영국으로 올 수도 있고, 이는 난자를 매매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 파우다대학(University of Pauda)에서는 논문을 통해 난자를 기증한 34명의 여성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난자 기증의 위험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에는 마비 혹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모든 공공기관이 성평등 정책 먼저 증명해야

영국의 성평등의무조례(Gender Equality Duty)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이 조례를 홍보하고 대상 기관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들은 기관 내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을 없애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공공기관이 성차별과 성희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조례의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중앙정부부처·의회·학교·병원·경찰 등은 물론, 정부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기획균등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고, 각 기관들이 증명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직급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없는가? 탄력근무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채용에 있어서 성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성별 불균형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육아휴직 이후에 직장 복귀율은 얼마인가?” 등이다.

각국, 저체중 모델에 대한 경종

지난해 브라질의 10대 모델이 거식증으로 사망하자,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가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 출연을 금지하는 등 모델들의 지나친 저체중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모델들의 저체중 현상은 10대 여성의 거식증과 섭식장애를 부추기고 있다며 디자이너들과 패션업계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패션디자이너협회 CFDA는 2월 뉴욕 패션주간을 앞두고, 모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사, 트레이너, 영양학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동 가이드라인은 섭식장애를 겪는 모델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질량지수(BMI) 18 이하의 모델도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뉴욕 주의회 리베라(Jose Rivera) 의원은 모델의 거식증, 저체중 문제와 18세 이하 모델 고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리베라 의원은 의사들과 패션업계 관계자, 모델 협의회 등과 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부에 고용제한규정을 신설해 건강하지 않은 모델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스페인 보건당국은 거식증을 부추기는 웹사이트를 단속, 폐쇄하기로 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먹지 않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을 홍보하면서, 하루 850 칼로리 이하로 먹거나 더 적게 먹을 때 점수를 더 주는 방법 등으로 극단적인 단식과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 보건 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거식증 유발 사이트를 정지시키고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중국, 한자녀 정책으로 남초(男超) 현상 심각

여성 인구의 부족으로 향후 15년 안에 약 3천만 명의 중국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의 인구 및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가 연구결과를 밝혔다.

1970년 이후 중국 정부는 강력한 인구통제정책인 ‘한 자녀정책’을 시행하였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불법적인 여아 낙태와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도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8명에 이르렀다. 농촌지역인 광둥성의 경우에는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30명에 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초 현상이 북한 등 인근 국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출산율과 관련 기존 가족계획정책의 기본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윈자바오(Wen Jiabao) 총리는 지역의 출산율 조절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보상체제와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화쩌엔민(Hua Jianmin) 국무위원은 의료적 필요 이외의 태아 성감별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는 여아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며, 출산율 조절과 양성평등 정책이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비혼 여성이 과반수 이상

뉴욕타임즈 신문은 미국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혼 여성이 전체 여성의 5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1950년 35%이던 비혼 여성의 비율이 2005년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선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인구학자 프레이(William H. Frey) 교수는 이같은 현상은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결혼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유연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며, 결혼이 더 이상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비혼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부중심의 기존 정부정책과 기업의 인력관리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혼 여성의 비율은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는데, 흑인 여성의 30%만이 배우자와 함께 살며, 히스패닉계는 49%, 백인은 55%, 아시아계 여성의 60%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여성 일왕제 백지화

아베 총리는 ‘여성 및 모계 왕족’도 일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백지화했다. 1947년 제정된 일본왕실법은 부계 아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왕실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정부는 여성 또는 모계의 자손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왕의 차남과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개정안은 보류되었고,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한 총리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백지화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반면, 일본 여론은 여성 일왕제에 호의적이다. 일부 학자 및 정치가들은 오랜 전통을 바꿀 때가 왔다면 서 아베 총리의 보수적인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2005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일본 국민 85%가 여성 일왕에 대해 지지를 보냈었다.

미국, “남편도 부인 성 쉽게 따르게 해달라” 소송

미국시민자유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남편이 부인의 성을 따를 때의 절차가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를 때의 절차보다 까다로운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혼인법은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를 때는 혼인 신고서의 빈칸에 이름을 적고, 50달러에서 8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면된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는 법적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명신청을 하면서 3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한 달 동안 바뀐 이름을 지방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6개의 주(州)만이 혼인신고서에 남편이 부인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 가정폭력 전문가 법원 추가 설립

영국 정부는 오는 4월 가정폭력 전문가 법원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 추가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지역마다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으나, 전문가 법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자 점차 확대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하트만(Harriet Harman) 법무장관은 전문가 법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법정에서의 가정폭력 기소 성공률이 2003년 46%에서 2005년 59%로 늘어났고, 가정폭력 전문가 법정은 71%의 기소 성공률을 보였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법원은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사, 판사, 법률 조연가, 경찰로 구성되며 법정은 피해자와 피해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멕시코, 연방 가정폭력법 제정

멕시코에서 연방차원의 가정폭력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칼데론(Felipe Calderon) 대통령은 야당과 좌파 정당 등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가정폭력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면서, 성에 기반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법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가 침해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과 정부기관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간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여성들의 사체가 계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진

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해 왔다. 전 대통령 산하 특별조사관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379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해 국경 근처에 유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터키, 여성 명예살인 금지 조치

유럽연합(EU)과 여성단체의 비판에 대응해, 터키 정부가 명예살인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긴급전화, 구조팀, 긴급피신처 등도 함께 마련하는 이번 조치는 명예살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례 없는 일이다.

명예살인이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남성 가족 및 친지가 여성 가족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자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여성이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폭력에 저항하는 것 등이다. 터키는 여성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EU 가입이 거부된 바 있으며, 보수파인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이슬람 전 지역에서 명예살인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터키 여성지위위원회(Woman's Status General Directorate)는 명예살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내무부는 지방정부와 협동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 쉼터를 건립하고, 보건부는 병원에 범죄진담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종교부는 전국의 종교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설교 내용에 명예살인이 왜 죄가 되는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대학들도 성폭력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의대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응급진료 교육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기술지원과 유럽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향후 2년간 진행된다.

파키스탄, 강제결혼 금지법 추진

파키스탄 집권당은 2월 강제결혼 및 여성의 상속권 박탈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전통 예방법안(Prevention of Anti-Women Practices Bill)은 집안 간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여성을 강제로 결혼시키던 지난 수세기 동안의 관습(vani)과 코란에 따라 결혼한 여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관습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무샤라프(Musharraf)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할 수 없었던 이슬람 관습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면서, 1979년 군부에 의해 도입된 모든 반인권적 이슬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미국 위안부 결의안 저지 계획

미국 하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 강제 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미 의회 사상 최초의 위안부 문제 청문회가 개최되었는데, 한국인 피해자 2명과 네덜란드인 피해자 1명 등이 출석하여 강제 납치과정과 피해를 증언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주미일본대사관은 일본이 이미 여러 번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일본이 여러 번 사과했으며 인권 모범국이라고 두둔하기도 하였다.

미 의회는 비슷한 결의안을 2001, 2003, 2005년 계속해서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일본의 로비로 인해 좌절되었다. 마지막 결의안도 2006년 9월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지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었다. 이번 안은 일본계 미국인 혼다(Michael Honda)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였다.

반면, 일본 자민당은 이번에도 동 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5월경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1993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요헤이(Kono Yohei) 당시 관방장관의 성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